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대책 마련을”

〈전북대병원〉

도의회 환복위 “정부는 긴급대책 마련하고, 권역응급의료 공백 따른 대체기관 지정하라”

전북도의회가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 지정 취소에 앞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30일에 발생한 중증의 상소이환자 사망사건은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환복위는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지만, 이 조치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복위는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서비스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이 높여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어떤 경우에도 최종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복위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하나밖에

없는 전라북도 권역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대체기관을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환복위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체기관이 없는 경우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복위는 재발방지대책을 전북대병원에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문재인 “국민들의 탄핵 요구에 왜 동참 안하느냐는 질책받고 있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하고 있는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 왜 야당이 앞장서지 않느냐는 질책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예들러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계 원로 인사들과 만나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럽다. 국민들의 분노, 상실감, 좌절감 이런 것이 아주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은 거의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폭이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갈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저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출범하게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저도 여러모로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저력들이 있다”며 “이번에도 지혜를 모아준다면 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야3당 “한일군사협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와 관련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종 현안대응 과정에서 대외 공세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야3당은 또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쌀값 안정화 대책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야3당은 9월5일 이미 합의했던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청문회, 갑오보통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안에 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뉴스1

이재명 “김무성·유승민도 공범”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김무성도 이경현도 유승민도 공범으로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친박·비박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며 새누리당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정질서 붕괴 국정유린 원인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그런데 최순실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피해자로, 새누리당은 심판자로 국민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은 청산주체가 아닌 청산대상일 뿐이다. ‘박근혜-새누리당 망국연합’이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친일과 독재, 부정부패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심판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국민의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숨도 못쉬는 ‘폐족 친박’ ... 일부는 “난 아니오”

이상돈 “친박은 2선 퇴진 아니라 정계도 은퇴해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가운데, 그를 따르던 새누리당 친박계들의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폐족 친박’으로 부르며 이들의 처참한 미래를 점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비박계가 자신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며 연판장 돌리기에 나섰으나 이를 못들은 척 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이 당내의 싸늘한 사신이다.

비박계의 ‘이정현 몰아내기’가 공개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친박들은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친박들은 오히려 ‘최순실 정국’에 행여나 유탄을 맞을까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기세 등등하던 얼마전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친박계 만형적인 서청원 의원은 ‘최순실 정국’이 절정으로 치달던 지난 27일 “대통령이 인사와 내각 해산을 통해 동력을 되찾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자중지란을 막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급기야 ‘박근혜 퇴진운동’의 촉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모양새다.

서 의원과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 29일 비공개 회동 이후 당내 의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사태 수습안을 논의했지만 묘수가 없어 발만 구르는 분위기다. 특히 박 대통령과 친박을 떠받치던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 확인되자 친박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대로는 당직이 없겠다며 큰소리를치고 있지만 공개적 활동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잘못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잘못 들이밀었다가는 차기 총선 안위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박계의 지도부 퇴진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참모진을 사퇴시켰고, 당에서도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지금과 같이 계속 흔들어대면 결국 당을 깨지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인사 역시 “당 지도부가 인적 해산을 요구하고, 거국내각 구성까지 받아들인 것은 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결단한 것 아니냐”며 “비박계의 집단 행동은 또다른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친박계를 향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며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냐”고 2선 후퇴는 물론 친박들에 배지를 뺄 것을 요구했다.

이때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합체 친박’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이정현 퇴진’ 연판장에 서명한 인사들 중에는 청와대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부 비례대표 인사들과 친박계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뉴스1

전재수 의원 “국민들, 세금 낸줄 알았는데 복채됐다고 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았는데 세금 내는 줄 알았는데 복채를 났다고 한다”며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 말보다 더 한 치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무유 예산만 해도 문제부

는 문화콘텐츠, 체육예산 곳곳에서 올해도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에도 최순실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될 경향이 나오고 있다”며 “무기사업, 군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대외 신인도, 환율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신인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외신보도를 보면

기가 찬다. 한국의 라스푸틴, 사머니즘, 사이비종교집단 스캔들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감정이 아주 격앙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1

서동석 박사,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서동석 박사(법학·행정학)가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기능 보강과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했다.

지난 2014년 군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는 서 부의장은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지역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의당 출범시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서동석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생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물론 다양한 정책분석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정책담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선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송지용,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감사 선출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감사로 선출됐다.



1일 도의회는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기 후반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감사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송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시·도의회 간 소통으로 상호협력하면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민형 기자

김종희 의원, 4개 사업 특별교부금 20억 확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시와 부안군을 위한 행사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 행복학습 직업체형 실습장 설치사업과 용지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부안군 노후 위도정수장 시설 개량사업과 신원천 상류 수질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5억원 씩 총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동안 김제시는 생애단계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실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학습실습과 전문 자격취득 및 직업훈련 교육시설의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에 확보한 김의원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김제시에도 베이비부머 및 은퇴예정자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 재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및 직업체형 실습교육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로의 재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용지 주민자치센터가 지방도 702호선, 735호선 교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노상주차로 사고위험이 높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안군의 위도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위도면 중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섬지역의 염기와 반응하여 부식과 노후화의 정도가 극심하였는데, 이번에 확보한 특교금을 통해 섬지역에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개발·건항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복개안거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및 악취로 인하여 사회효과가 떨어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는 이번 특교금 확보는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관영, 해망 IC 교차로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군산~장항 간 동백대교 공사 관련, 토지 보상 문제 및 각종 케이블이 매설돼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해망IC 교차로 확장공사에 송동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 국민의당)은 차선 불부합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와 안전 문제로 확장공사가 시급했던 해망IC 연결도로(도선장사거리) 공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행사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연중 상시 재정수요에 맞춰 부정기적으로 추가 배부해주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군산시 속인 사업임에도 오랫동안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산시민의 염원과 시와의 긴밀한 공조로 이번 해망교를 올릴 수 있었다”면서 “해망IC는 동백대교 막바지 공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국가예산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특교 예산을 담당하는 행사부가 국비예산 최초로 1호선 시대를 연 바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